한국판 그린뉴딜 **전북에서 첫 발걸음**

2.4GW 주민상생형 서남권 해상풍력사업 본격화

전북 서남권 해역 일원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본격 추진되며 한국판 그린뉴딜사업의 서막이 올랐다.

특히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합의로 추진되는 첫 번째 대규모 사업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뒤이은 행사여서 의미가 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17일 전북 고창과 부안군 해상에 설치된 60MW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2.4GW '주민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MOU참여 인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라북도지사, 고창군수, 부안군수, 한국전력 공사 사장, 한국해상풍력 사장, 민관협의회 주민대표(2))

업무협약에 따라 400MW 규모의 시범단지는 2022년에 착공,2028년까지 2.4GW 사업을 완료해 224만 가구(석탄발전 5기규모)에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부총리, 산업부,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고창,부안 단체장, 기업 관계자 등과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낸 민관협의회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그린뉴딜 중심지로

송하진 도지사는 업무협약식에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그린뉴딜 중심지로 조성해 해상풍력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은 전북도가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 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에너지산업 국가종합실증단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해 태양광 3GW에 6조6천억원을 투자하는 새만금태양광 사업과 함께 한국형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 주민합의로 사업추진

주민대표가 업무협약에 참여한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에서 주민합의로 대규모 사업추진을 성사시킨 첫 사례이다.

도는 지난해 7월 23일 국회, 산업부, 고창군, 부안군,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발전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출범시켰다.

이후 28차례(정기11, 수시17) 회의를 거치며 실증단지 추진 시 문제점, 수산업 공존 가능성, 주민이익 공유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그간의 해상풍력 사업은 행정의 부재 하에 발전사업자 중심의 사업추진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자와 주민간의 마찰, 주민 간 찬,반 대립으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고 지역이 분열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의 주민대표가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구성,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서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 및 주민상생 방안을 수립, 사업단계마다 주민참여를 바탕한 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주민과 함께하는 해상풍력-수산업 상생방안·비전 제시

14조원 투자…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에서
주민합의로 대규모 사업추진 성사시킨 첫 사례
침체된 전북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클 듯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수산업과 공존을 위해 주민이 발전단지 설계부터 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조사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개발방식으로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된다.

또한 단지 조성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시켜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위해 풍력단지 내 10톤 미만의 어선에 한해 통항을 허용하고 어선어업과 복합양식단지 조성을 허용하는 대체어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자원감소, 어업인의 고령화, 시장개방 확대 등 어려움을 겪는 어촌계에 양식장 조성, 종패 지원 등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 소득창출과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더불어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으로 추진 연간 762억원, 20년간 1조5,000억원을 주민에게 투자금의 이자로 지원하게 된다.

해상풍력, 전북경제 선도 전망

이번 비전선포에 따라 전북은 정부의 해상풍력 테스트 베드인 3,718억원이 투입된 60MW 규모의 실증단지에 이어 2.4GW 규모의 시범확산단지를 조성해 해상풍력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14조원이 투자되는 전북지역 최대규모 사업인 만큼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 OCI 군산공장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된 전북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으로의 업종전환을 추진 중인 군산지역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안정적 납품수요가 기대된다.

향후 계획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중 시범단지 400MW는 한국해상풍력(주)에서 2022년 착공하고, 나머지 2GW는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착공하여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도는 원활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지속운영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이 지자체주도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합의로 사업추진이 결정된 첫 사례로서 전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이 그동안 깊은 애정을 보여주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구축 사업과 함께 반드시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중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정 총리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근원대책 조만간 발표"

아동정책조정위서 아동정책 기본방향 등 논의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돌봄 취약 가정에 AI 기술 이용 비대면 서비스 도입"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시간을 보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최근 이어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위기아동 조기발견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어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4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미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학대 사례가 근절되고 있지 못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아동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향후 5년 간의 아동정책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사회적·경제적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양과정에서 공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재난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한 돌봄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대규모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시설별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돌봄이 취약한 가정에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북도, 주요 피서지 식품업소 위생점검

전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들이 자주 찾는 피서지의 식품안전을 위한 행보를 시작한다.

도는 시군과 20일부터 31일까지 피서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와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취급 시설과 보양식, 갈비 취급 음식점, 빙과류, 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이다.

특히 전북도와 시·군은 최근 경기도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점에서 일명 '빨아쓰는 고기'로 전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는 만큼 ▲부패, 변질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등에 대해 단호하고 철저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전북도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7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하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하여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다.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2020년 6월말 기준)이 도세 1억4700만원, 시군세 6억1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나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한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에 방문,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신청 계좌로 환급된다.

또한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장수군 공고 제2020 - 873호

장수 군관리계획(호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재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장수 군관리계획(호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장수군 공고 제2020-429호(20.3.27.)로 주민의견청취한 사항으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장수 군관리계획(호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2	호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호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정형)	계남면 호덕리 1213번지 일원	61,244	감) 11,026.4	50,217.6	장수군 고시 제2017-92호 (17.8.25)	

※ 재공람사유
   장수 군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 반영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서 : "붙임생략"
   ※ 지구단위계획조서 : 군홈페이지 열람

2. 주민공람 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063-350-2578)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까지
   ○ 제출방법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공람기간 내 제출
4. 기타사항
   ○ 본 열람(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과(063-350-2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0일 장 수 군 수